

사회

112는 '통화중'

신고 폭주 땀 '뚜뚜뚜' 위치·번호 입력 안돼 ... 시스템 개선 시급

회사원 노모(36·광주시 남구 주월동)씨는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을 겪었다. 최근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서 새벽 2시께 부인과 함께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여객을 치인 것이 화근이었다.

접촉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다짜고짜 노씨의 얼굴을 서너 차례 때리고 넘어뜨렸다. 노씨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30여분간 머리를 수십회나 짓밟혔고, 이를 말리던 부인(30)도 뺨을 맞는 수모를 겪었다.

운전자의 무자비한 행동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노씨는 112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허사였다. 2분이 넘도록 112 신고 시스템이 통화중이었던 것이다.

노씨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사과는 커녕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렸다"며 "급한 마음에 112에 3~4차례나 전화를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통화중인 112 때문에 죽을 의문까지 갔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운영중인 112 신고시스템이 통화량이 일시에 몰리던 통화중 신호음이 계속돼 긴급 상황 발생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12와 직접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자의 위치나 전화번호 등 어떠한 정보도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피해자로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112에 전화를 걸지만 통화중인 경

광주지역 신고 4명이 담당

금음방강도 사건 때도 논란

경찰 "인원 부족 어쩔수없다"

우가 있고,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신고를 접수받는 112 지령실에는 14명의 요원이 3개 조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다. 광주지역 내의 모든 범죄 신고를 단 4명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이들은 1인당 60회선의 전화를 맡고 있어 신고량이 폭주할 경우 통화중 현상이 불가피하다. 실제 지난 4월 15일 남구 구동에서 발생한 4인조 보석강도 사건 때도 112 신고가 더디게 연결돼 는

란이 일었다. 사건 당시 피해자 김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용의자들을 뒤쫓던 중 112에 3~5회 전화를 했지만, 통화 중을 알리는 '뚜뚜뚜' 소리가 울렸던 것이다.

당시 김씨는 "112 신고 접수만 제때 이뤄졌으면, 일당을 모두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당시 경찰은 "112 지령실에서 신고 전화를 받는 5명이 모두 신고 전화를 받으면 어쩔 수 없다.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4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하루 500건의 신고전화 중 27%가 집중되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모든 신고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 김병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112 신고 전화가 통화중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통화중 현상을 방지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스템의 오류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새터민 합동 차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26일 오후 광주시 임동 광주적십자사 봉사관에서 고향을 방문할 수 없는 새터민들과 함께 합동 차례를 지냈다. /위직람기자 jrwi@kwangju.co.kr

5·18 학생시절 반독재 투쟁 승려

29년만에 무죄 '명예 회복'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내란죄로 5년간 복역한 뒤 승려가 된 이가 2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관사

이상철)는 승려 유모(49)씨의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전 대통령) 등이 주도한 1980년 5·18 내

란은 헌정질서파괴 범죄로, 유씨의 행위는 이런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 존립을 도모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 한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유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교내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등을 결성해 언론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고 반독재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1980년 군사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이듬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앗! 달리는 차에 황구렁이가"

광주 유촌초교 앞길 1m짜리 떨어져 ... 119센터서 포획

'멸종위기종' 아산 방사

광주 도심에서 멸종위기의 황구렁이가 주행중인 승용차 위로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7일 광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정모(29)씨는 지난 26일 밤 9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유촌초교 앞길에서 5·18 기념재단 방향

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트렁크 쪽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정씨가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가자, 길이 1m의 황구렁이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다. 정씨는 곧장 차를 몰고 화정동 119안전센터로 갔고, 구조대원들은 황구렁이를 포획한 뒤 인근 아산에 방

사했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황구렁이가 가로수로 올라가던 중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정씨의 차 위로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구렁이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으로 도심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화순 양계장 불...닭 3만여마리 폐사

26일 새벽 1시께 화순군 동면 장모(45)씨의 양계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0여분 만에 진화

됐다. 이날 발생한 화재로 산란을 앞둔 닭 3만6천여마리가 폐사하고 양계장

2개동 2천310㎡가 전소돼 9천7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은 양계장 천장에서 불꽃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나원침 (7914) 김중두



섬진강 물놀이 초등생 익사

지난 26일 오후 5시40분께 곡성군 오폭면 섬진강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광주 A초등학교 1학년 장모(8)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장군은 이날 광주 광산구 M아동센터 교사의 인솔 아래 학생 26명과 함께 현장체험학습을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센터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이삿짐 나르다 500만원 수표 '술찍'

이삿짐을 옮기면서 집주인이 감춰둔 수표 통치를 몰래 쟁긴 40대 이삿짐센터 사장이 경찰에 달미.

○광주남부경찰은 27일 이삿짐센터 사장 김모(47)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중.

○김씨는 지난 4월 초 광주 남구 양림동 최모(63)씨의 주택에서 이삿짐을 나르던 중 장롱 위에서 100만원권 수표 5매가 든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

○경찰은 지난 8월 집주인 최씨로부터 "이삿짐 센터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추적이 나섰는데, 김씨는 경찰에서 "수표에 서명까지 하고 이미 사용했다"고 진술.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12요? 불법 주차 차량 좀 빼 주세요"

112에 긴급 범죄신고 아닌 생활 민원 급증

광주 올 3만8천 여건 ... 업무 수행 '걸림돌'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와 전화 번호 문의 등 경찰 업무와 무관한 112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인력 낭비는 물론, 비상 상황 발생시 경찰의 대응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에서 접수된 112신고 건수는 총 9만9천521건에 이른다. 112 신고시스템을 통해 하루 평균 553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중 강도·절도·살인·폭력·강간 등 5대 사범 신고는 1만3천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천83건)에 비해 7.3%(1천23건) 줄었다. 반면 교통사범 및 경범죄 신고 건수는 1만9천853건으로, 1년 전(1만9천421건)보다 2.2%(432건) 늘었다.

특히 올 들어선 층간소음이나 불법주정차·차량방전 등 경찰업무와 무관한 생활 민원성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심지어 식당의 음식값이나 전화번호를 묻는 전화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 광주의 비 범죄성 생활

민원 신고 건수는 모두 3만8천270건. 이는 112 신고건수의 38.5% 수준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신고건수(4만442건)에 거의 육박했다.

이같은 생활민원 신고는 경찰의 인력 운용과 업무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원 신고 급증은 경찰관의 과도한 현장출동을 불러일으켜 다수 인력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강력범죄 현장 출동 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경우엔 110번(행정민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
전통적 명인지성

국내산 100% 블루베리

화순 양계장 불...닭 3만여마리 폐사